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마당 한 켠에 방문객들이 내다 버린 쓰레기들을 미화원들이 치우고 있다.(왼쪽) 24일 밤에도 광주시 동구 충장동의 한 가게 앞은 일회용 쓰레기들로 넘쳐났다.

거리두기 해제에 '거리 투기' 극성

문화전당 하늘마당·유흥가·유원지 등 불법 쓰레기 몸살

광주시, 쓰레기통 설치 난색 "불법투기장소 변질 우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일상회복의 바람이 부는데다 날씨까지 풀리면서 갇혀있던 시민들이 도심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 곳곳 시민들이 모이는 곳마다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음료를 마시고 아무렇게나 던져버린 일회용 컵부터 취사 행위나 배달 음식 등에서 비롯된 음식물 쓰레기까지, 시민들이 버린 양심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매일 아침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마당 앞에서는 ACC 소속 환경 미화원들이 지난 밤 버려진 쓰레기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일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로 개장한 이후 빠르게 입소문이 나면서 ACC 하늘마당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크게 늘고 있다.

대부분이 젊은이들로 매일 밤 돗자리를 준비해와 선선한 초여름밤 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 음료수 컵 등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방치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금연·금주 팻말이 붙어 있어도 밤마다 이곳에서는 음주가 이어지고 있고, 각자 포장해 오거나 배달시킨 음식을 먹은 뒤 나온 쓰레기를 분리수거 없이 한꺼번에 내다 버리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이리저리 뒤섞여 있는 일회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다.

이렇게 내다 버린 쓰레기에서 나는 악취로 시민들은 코를 막고 지나가기 일쑤다.

하늘마당에서 수거되는 쓰레기 양은 개장 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매일 아침 1t 트럭 한 대 분량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주말이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ACC 소속 남성 미화원 17명 중 6명이 매일 아침 쓰레기 수거에 투입되고 있다.

ACC시설 관리 담당자는 "하늘마당 앞에 쓰레기통이 한개 설치돼 있는데 치우자니 쓰레기가 아무 곳에나 버려질 것 같고, 놀리자니 쓰레기 양이 더 늘어날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심 유흥가도 늘어나는 시민들만큼 급증한 쓰레기로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다.

동구 충장로, 구시청 일대 , 북구 용봉지구, 서구 상무지구 등 유흥가에도 불법 쓰레기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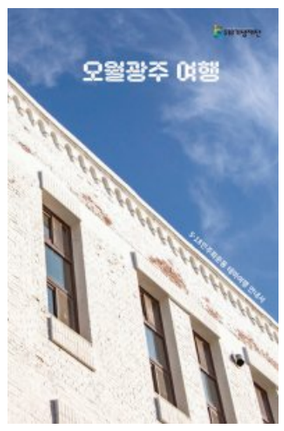
광주 서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끝난 이후로 상무지구 길거리나 화단, 변압기 등에 방치된 쓰레기가 이전보다 1.7배 가량 늘었다"며 "상무지구 인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만 보통 3시간이 걸렸다면, 요즘은 4시간 반을 해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말했다.

나들이객 들이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불법 쓰레기도 늘어나고 있다. 무등산 산장 근처 도로변에는 드라이브를 하다가 쓰레기를 봉투에 넣고 버리는 모습이 심심찮게 눈에 띄고 있다.

2년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김환휘(48)씨는 "용봉지구 인근 카페들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일회용 컵 쓰레기를 화장실 창틀 앞에 쌓거나 공원 주차장 울타리 밖으로 던져놓는 경우까지 있어 수거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영업시간이 늘어날때마다 쓰레기가 늘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때보다 2배는 늘었고, 불법전단지도 많이 늘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쓰레기통을 늘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 온라인 민원플랫폼 '바로소통광주'에는 지난 12월 유흥가·대학가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광주시는 "쓰레기통을 새로 설치하면 주변이 불법투기 장소로 변질돼 관리하기 어렵다"고 거부 의사를 밝혀 결국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버리는 시민의식이 절실할 수 밖에 없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 사적지를 가다

기념재단 '오월광주 여행' 발간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와 사적지 주변 정보를 안내하는 책자인 '오월광주 여행'이 새롭게 발간됐다.

5·18기념재단은 광주 여행자를 위해 5·18민주화운동, 5·18사적지 정보, 사적지 주변 맛집, 체험시설 등 최신 맞춤 정보를 담은 '오월광주 여행' 소책자를 공식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책자는 5·18사적지 안내책자 '당신이 모르는 그곳 오월광주' (MOVE, 2021)와 5·18안내해설사(오월지기)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안내해설 가이드북' (비매품, 5·18기념재단, 2021)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책자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적지 29곳의 위치를 알수 있는 지도와 사진도 담겨있다.

5일차 여행코스로 꾸며져 있어 사적지와 주변 명소를 모두 둘러볼 수 있게 구성돼 있다.

광주지역 사적지 뿐만 아니라 목포·나주·해남 등 전남지역 사적지에 대한 위치정보도 포함됐다.

이 책은 '오월길 방문자센터' (5·18민주화운동기록관)와 5·18기념재단에 비치돼 있다. 누구든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오월길'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교 석면 제거' 교육감 선거 이슈로"

환경단체 실태조사, 전남 학교 10곳 중 6곳 '석면 여전'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절반가량의 학교 건물이 여전히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는 환경단체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체들은 이 문제를 이번 지방선거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중요 이슈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25일 '전국 학교 석면 현황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4~5곳은 여전히 '석면학교'"라며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 이슈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로 잠복기를 거쳐 흉막질환, 폐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체의 조사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1만1946개 초·중·고교 가운데 총 5454곳(45.7%)은 아직 석면 철거 공사를 하지 않았다.

학교별로 보면 고등학교의 석면 제거율이 가장 미진했다. 전국 고등학교 2371곳 중 53%인 1275곳에 아직 석면이 남아있다. 이어 초등학교 44.6%, 중학교 42.4%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59.0%로 석면학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남(58.8%), 서울(58.6%), 충북(56.0%)이 뒤를 이었다. 광주는 39.4%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45.7%다.

한편 2027년까지 전국 학교의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방학 기간에 석면 제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80년대도 아니고… "기숙사 남학생 두발 강제는 인권 침해"

인권위, 지역 한 국립대에 재발 방지대책 주문

남학생에게 뒷머리는 두피가 보이도록,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도록 이발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위반 시 벌점을 부과했다.

1980년대 단발 단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생활관비와 제복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특수목적대학인 광주·전남지역 한 국립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난해 실제 일어난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전남의 A국립대학교 총장에게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생활관 내 두발제한 실태를 파악해 학생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A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는 재학생은 "학교가 기숙사 남학생에게 두발 규정을 강제하고 따르지 않으면 벌점을 부여하겠다"고 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과거에 남학생은 '단정한 스포츠머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을 삭제했고, 짧은 두발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가 2018년 두발 제한 규정을 삭제했지만 이듬해 1학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여전히 남학생에게 두발 관련 기준 이행을 강요하고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한 점이 확인된 점을 들어 학교 측이 기숙사 남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숙사 지침에 용모 및 복장 상태가 불량한 학생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생들이 두발 관련 지적 사항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생들이 제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모자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발을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